

# 여야 극한 대립... 8월 국회도 '끝없는' 정쟁

채상병 특검·노란봉투법 대치 지속  
야, 단독표결 처리...여, 거부권 건의  
법사위 등 상임위 곳곳 전운 감돌아  
'검사 청문회'·'방송장악 국조' 대치

여야의 극한 대립으로 얼룩진 7월 국회 상황이 8월 임시국회에서도 이어져 국회가 정쟁의 늪으로 끝없이 빠져들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5일 열릴 예정인 8월 임시회 첫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단독 처리에 나설 예정이다.

앞서 국민의힘의 주도의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는 4일 자정 종료됐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에서 '방송 4법'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을 단독 처리한데 이어, 8월 임시국회 시작과 동시에 노란봉투법도 통과시킬 방침이다.

또 3번째 '채상병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대어 공세를 예고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방송4법'과 '25만원 민생지원금법', '노란봉투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여당은 각각 '야당의 공영방송 영구 장악법', '현금살포법', '불법파업 조장법'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정지권에선 '야당 주도 입법, 필리버스터, 본회의 통과, 거부권 행사, 재의결, 부결(폐기)' 과정이 도돌이표처럼 반복되는 여야 대치 정국이 올 연말을 넘어 내년

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마저 나온다.

민주당 등 야권은 8월 국회에서 노란봉투법을 최대한 빨리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파업 노조원을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로부터 보호하는 노란봉투법은 이미 한 차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정부의 반대가 여전해 또 다시 거부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무제한토론 끝에 통과된 '방송4법'과 '25만원 민생지원금법'에 대해서도 거부권이 행사될 가능성이 높다.

거부권이 행사되면 윤 대통령이 2년 임기 동안 거부한 법안은 총 21건이 된다.

민주당은 3번째 '채상병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8월 국회에서도 '탄핵 공세'를 이어갈 태세다.

지난 2일을 기준으로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기록이 이첩된 지 1년이 지나 통화기록 등 수사외의 증거들이 소멸할 수 있는 점을 '속도전'의 명분으로 제시했다.

이와 동시에 민주당은 더 강력한 채상병 특검법 발의를 예고하면서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전당대회에서 밝힌 '제3자 특검 추천'을 내용으로 한 특검법안을 발의하라고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미 두 번의 부결을 통해 채상병 특검법이 재표결 문턱을 넘기기는 어렵다는 점이 확인된 만큼, 세 번째 부결을 막으려면 특검의 주체를 떠나 국민의힘에서도 특검법안을 내야 협상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거대 야당은 '더 강력한 대어 압박 전략'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의총에선 추미애 의원이 3번째

채상병 특검법을 관철시키기 위한 전략과 관련 "삼부토건 추가조작 문제를 면밀하게 살피면서 특검법과 국정조사를 같이 갈 필요가 있지 않겠나"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법사위와 과방위 등 상임위 곳곳에서도 전운이 감돌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14일 법사위에서 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와 관련한 청문회를 열어 김건희 여사 의혹 공세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과방위에선 9일 '방송장악' 청문회를 바탕으로 국정조사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소속인 최민희 과방위원장에 대한 제명추구 결의안을 발의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8월 국회에서도 여야의 날 선 대치는 계속될 전망이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 尹, 오늘부터 여름휴가... '지역경제 활성화' 홍보

윤석열(사진) 대통령이 5일부터 여름 휴가에 들어간다.

윤 대통령은 휴가 기간 민생 현장을 살피고 군을 격려하는 한편, '방송4법' 재의 요구 등 현안 대응도 이어갈 전망이다.

4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휴가 기간 동안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여러 지역을 다니며 지역 경제 활성화 홍보에 주력할 계획이다.

휴가 기간은 현장 홍보 일정이 추가될 수 있어 유동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내수 진작을 위해서라도 휴가를 줄이지 말고 다 사용해 달라"고 국무위원들에게 당부하면서 "저도 지역과 내수를 살리는 데 더욱 관심을 기울여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여름휴가 때 새만금 투자협약식, 잼버리 개영식에 참석하고 거제 전통시장장을 찾아 수산물 안전성



을 강조했다.

진해 해군기지에서 장병들을 격려하기도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휴가 기간 현장 홍보뿐 아니라 주요 국정 현안을 계속 보고 받는다.

당면 현안은 야권이 단독 처리한 '방송4법'이다. 방송4법은 지난달 30일 정부로 이송됐다. 정부가 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곧바로 재의요구안을 의결하고 윤 대통령이 전자 결재 방식으로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광복절 전 발표될 '부동산 공급 확대' 합동대책도 최종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최근 서울 집값 상승세에 대해 "투기수요로 인한 가격 상승은 막아야 한다"며 공급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안, 국회 통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 2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6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진숙 방통통신위원회 위원장 탄핵소추안이 상정되자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 2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6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진숙 방통통신위원회 위원장 탄핵소추안이 상정되자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 "상반기 지방세 진도율 하락... 세수 확보 비상"

광주 47.7%·전남 48.7% 불과  
양부남 "지자체 재정난 심화"

광주와 전남의 올해 상반기 지방세 진도율이 법인실적 감소 등의 영향으로 작년보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지방세수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6월 지방세 진도율이 작년 상반기보다 하락한 곳은 광주와 전남을 포함해 서울, 인천, 세종, 경기, 충남, 경북, 전북, 제주 등 10곳이다.

올해 상반기 진도율이 작년보다 낮은 곳 중, 가장 큰 차이가 나는 지역은 전남이다.

전남은 이 기간동안 지방세를 1조9479

억원 걸어 진도율이 48.7%였다.

작년 상반기(56.2%)보다 7.5%포인트(p) 낮아 가장 차이가 컸다.

광주는 1조2418억원을 걷어 진도율이 47.7%였다. 작년(48.1%)상반기 보다 0.4%p 낮았다.

전국 시도 17곳의 상반기까지 지방세 수입은 50조6000억원으로 작년보다 1조8000억원(3.3%) 감소했다.

올해 상반기 지방세 진도율은 올해 예상했던 연간 지방세수 대비 해당 기간 지방세수가 얼마큼 걷혔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작년 진도율은 실제 걷은 지방세를 기준으로 한다.

올해 진도율이 작년보다 낮으면, 실제 지방세 실적이 예상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지방 세수 감소의 주요 배경에는 법인실적의 부진이 꼽힌다.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연결법인 5개월 이내)에 지방소득세의 형태로 세금을 낸다.

법인 실적의 감소가 국제 수입뿐만 아니라 지방 세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셈이다.

양 의원은 "국세 감소에 따른 교통부세 2년 연속감소 우려에 지방세수감소까지 지자체의 재정 어려움이 심화할 수 있다"면서 "중앙정부는 지자체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지자체가 주민 행정서비스 등을 원활히 제공할 수 있도록 대책 등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 한동훈 대표, 이번주 당직 인선 마무리

한동훈(사진) 국민의힘 대표는 정점식 전 정책위의장 후임에 TK(대구·경북) 4선인 김상훈 의원을 내정한데 이어, 후속 당직 인선을 이번 주 마무리한다.

지명직 최고위원에는 김종혁 전 조직부총장, 여의도연구원장에는 홍영림 전 여의도연구원장 등 측근들을 중심으로 중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5일 당 최고위원회에서 추가 인선을 의결할 예정이다.

지명직 최고위원에는 친한계 원외인사인 김종혁 전 조직부총장을, 전략기획부총장에는 전당대회 캠프 총괄상황실장을 맡았던 신지호 전 의원을 내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의도연구원장에는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 시절 임명된 홍영림 전 원장의 재신임 가능성이 높다.

신임 홍보본부장은 장서정 전 비상대책위원이 맡게 될 전망이다. 대변인단에는 정광재 전 대변인을 포함해 윤희석 선임대변인, 김윤현 전 부대변인 등 기존 캠프 인사들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한지아 의원도 대변인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조직부총장에는 비주류 성향의 김재섭 의원 등이 후보군에 오르고 있다.

서울=김선욱 기자

## 이병훈 "당원으로 돌아가 정권 심판 함께할 것"

### 민주 시당위원장 임기 종료 성명

이병훈(사진)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이 임기 마무리를 앞두고 지역 시민 및 당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 위원장은 4일 '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이 이병훈입니다'라는 제목의 보도문을 통해 "당원들과 소통·화합·혁신을 위해 달려온 지난 2년은 영광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새로 선출된 양부남 신임 위원장에게는 축하를, 당선되지 못한 강위원 후보에게는 위로의 말을 전한다"며 "광주민주당의 발전을 위해 화합·혁신에 노력을 다해 달라. 평범한 당원으로 돌아가지만, 무도한 정권 심판과 정권 교체가 이뤄지는 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당부했다. 정성현 기자

## 차영수 도의원, 농어촌 수요응답 버스 확대 제안

농어촌지역 도민 이동 편의를 위해 수요응답형 버스(DRT)를 조속히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차영수(더불어민주당·강진·사진) 의원은 최근 전남도 대중교통 활성화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농어촌버스가 수요와 관계없이 운행되다보니 빈 차로 다니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비효율적인 운행방식 대신 수요

응답형 교통 체계를 강화하면 이동이 필요한 도민에게만 버스를 보낼 수 있어 효율적"이라고 밝혔다.

수요응답형 버스는 대중교통의 노선을 미리 정하지 않고 여객 수요에 따라 운행구간, 정류장 등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버스로, 이용자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이용할 수 있다. 도내에서는 나주, 화순, 영암에서 운영을 시작했다.



차 의원은 "수요응답형 버스를 22개 시·군으로 확대 시행하면,도가 비수익 노선을 유지하기 위해 매년 지출하는 재정지원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며 "특히, 전남은 고령화와 인구 유출로 교통수요가 줄어들고 있는 만큼 수요응답형 버스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오지현 기자